

## DMZ 탄생의 역사적 난제와 해결방안

정주신 한밭대학교

### 논문요약

이 글은 미소군정의 한반도 분단과 38°선 획정, 6.25전쟁을 회고하면서 DMZ 탄생의 역사적 난제와 해결방안을 고찰하는 데 근본적인 연구의 목적을 지닌다. DMZ 연구를 위해서는 한반도 분단과 관련된 역사적 난제들을 풀어나가야 한다. 38°선도 그렇고, MDL도 그렇고, DMZ도 그렇고, 외세나 외세에 합작한 결과물이 결국은 한반도 분단과 분열을 가져왔다는 생각이다. 이 뜻은 아직도 한반도는 통일이나 통합의 실체가 민족 내부이기보다는 외세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한반도 분단과 관련된 역사적 난제들을 풀어나가는 노력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이 글에서 38°선을 소환한 이유도 DMZ와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이다. 결국은 한반도의 평화나 통일을 위해서는 38°선과 6.25전쟁, MDL과 DMZ를 새롭게 개진해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분단 76년 정전 68년이 되었지만 한반도는 달라진 게 없다. 과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위한 6자회담도 소환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역사적 난제, 38°선, 한반도 분단

## 1. 서론

'비무장지대'(DMZ, demilitarized zone)는 한반도 통일 토대와 평화 지대를 이룩하는데 중요한 전략적 요새지이다. DMZ는 정전(停戰)의 조약이나 협정에 따라서 전쟁에 쓰이는 무기나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1953년에 UN과 중국·북한 간에 체결된 맺은 '한국 휴전협정'에 따라 설치된 것이다. DMZ는 설치된 지 68년이 되는데,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주로 적대국의 군대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군대의 주둔이나 무기의 배치, 각종 군사시설의 설치가 금지되며 무력 충돌을 방지하려는 것이며, 둘째는 운하·하천·수로 등의 국제교통로를 확보할 목적에서 설정된 것이다. 이 글에서는 두 번째 목적을 위한 운하·하천·수로 등의 국제교통로를 확보할 목적에서 설정된 경우는 현재 정부 측이나 국제환경전문가나 학자들에 의해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 있으므로 논외로 하고자 한다.

1950년 6·25전쟁 발발이후 남북한 간에 휴전(休戰)할 목적으로 설치된 DMZ는 첫 번째 목적에 맞게 주로 적대국의 군대 간에 발생할 무력 충돌을 방지하는 것이었다. DMZ는 그 당시 남북 군대가 맞닿은 '군사분계선'(MDL, Military Demarcation Line; 휴전선)으로부터 남북에 각각 2km씩 대열(隊列)로 한반도 동서를 155마일(약 250km) 가르는 전체 4km 폭 약 3억 평의 '완충지대'(buffer zone)의 비무장 구역으로 설정한 것이다. DMZ 안에는 국제감시단으로 파견된 중립국 감시단이 지속적으로 해당 구역이 비무장으로 잘 유지되고 있는지의 감시 활동을 펼치는 대신에 민간인의 출입이 허락되지 않는다. 현재 남한 측과 북한 측을 공유하는 DMZ 안에는 '군사정전위원회'(MAC,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sup>1)</sup>와 '중립국감시위원회'(NNSC, Neutral Nations Supervisory

1) MAC는 쌍방이 각 5명씩 총 10명의 고급장교로 구성된다. 그 중 각각 3명씩은 장성급으로 하고 나머지 2명씩은 대령급 이상자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동 위원회 산하에는 비서처와 10개 공동감시소를 두었으며, 각 공동감시소는 4-6명의 영관장교로 구성하되 쌍방이 각기 절반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Commission)<sup>2)</sup>가 있는 판문점(板門店)이 있다. 판문점 구역은 주로 회담이 개최되는 건물을 포함한 그 주변의 장소로서 남북이 함께 공동경비를 하는 DMZ 안의 특수한 지역이다.

국가 간 및 국제적으로 관계국 간의 협정으로 설정된 DMZ는 서로 적대 관계에 있는 국가 또는 군대 사이에 무력충돌을 막기 위한 조약 등에 의해서 무장을 금지하는 완충지대이자 국가 간 무장해제가 핵심이다. 즉 비무장화, 일정한 완충적 공간의 존재, 군사력의 분리 또는 군대의 격리 배치, 감시기구의 설치 등이 그것이다(김현정 2021, 71). 한반도에서 DMZ는 남북 간의 분단 장벽이지만 극복되어야 할 통일 장벽이다. 38°선 분단과 6.25전쟁, 휴전이란 냉전의 대결지로서 한반도에 드리워진 DMZ는 한반도 통일문제의 미해결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DMZ는 한반도의 허리부분에 광범위하게 자리잡고 있어 아직도 남한과 북한의 체제나 이데올로기에 가로막혀 통일로 극복되지 못하고 분단과 전쟁의 부산물로 남아있다.

주지하듯이 제2차 대전 이후 한반도는 일제의 패전에도 불구하고 소련군이 한반도에 남하하고, 미군이 소련군의 남하를 억제하기 위해 38°선을 획정한 상태였다. 38°선 이북(以北)은 소련군이 장악하고 이남(以南)은 미국군이 장악한다는 맥아더(D. MacArthur)의 ‘일반명령 1호 포고령’이 선포되면서 남과 북은 38°선으로 양분되었고, 동서냉전을 주도한 미군과 소련군이 각각 주둔하였다. 1941년까지 한국문제는 러시아, 중국 및 일본 등 한반도와 이웃한 열강들의 독점적인 관심사였는데, 미국으로서는 한반도를 미국의 국가이익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제가 패전국이 되면서 한국 문제는 또 다시 열강들의 영향력의 경쟁대상으로 부각되고 있었고 1945년 미국이 한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주요 경쟁자로 등장했다(제임스 I. 매트레이 1989, 16). 이 과정에서 미국은

2) NNSC는 4명의 고급장교로 구성되며, 그 중 2명은 UN군 측에서 지명한 중립국인 스위스와 스웨덴 장교로 임명하고, 다른 2명은 공산군 측에서 지명한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 장교로 임명되었다. 동 위원회는 쌍방 공히 각 5개 출입항에 중립국 감시소조와 이동감시소조를 주재시킬 수 있었으며, 활동결과를 군사정전위원회에 보고하였다.

맥아더의 일반명령 1호 포고령과 3년간의 점령정책으로 한반도의 운명을 쥐락펴락하였다. 그리고 일제로부터의 해방과 미·소 양국 점령 3년 후인 1948년 남과 북은 상이한 이데올로기를 가진 정치체제로 각각 분단체제가 수립되었는데, 미국은 이에서 결코 자유롭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2년 후인 1950년 남북 분단 상황에서 남북한이 상이한 통일이란 목표와 명분을 앞세웠을 뿐, 통일보다는 38°선 분단과 'MDL'을 공고화한 것은 6.25전쟁의 상흔과 이에 대한 미·중의 개입이 결정적 영향을 끼친 셈이었다. 북한의 적화통일에 기인한 6·25전쟁은 미국군의 개입과 중공군의 개입으로 국제전으로 비화되면서 막대한 희생을 강요받았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남침, UN군과 한국군의 9·15 인천상륙작전과 9·28 서울수복 이후 북한에 대한 진격, 그리고 10월 19일 중국 인민지원군(인민군)의 북한을 돕기 위한 참전(抗美援朝)이 있었다. 그리고 1951년 1·4후퇴로 2년 간의 포로문제 처리와 남·북 간 휴전 문제로 전쟁은 지연된 채 오히려 한반도 분단과 구획 획정을 공고히 하는 결과만 남기고 1953년 7월 27일 종전이 아닌 휴전(정전)을 맞게 된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전쟁의 후유증 끝에 한반도에 DMZ가 생겨난 지 어언 68년이 되었다. 1989년 11월에 독일 분단의 상징인 동서베를린을 갈라놓았던 베를린 장벽 해체에 이어 1990년 10월 독일이 통일된 지도 31년이 지났다. 그러나 2021년 10월, 한반도에 가로놓인 38°선과 MDL(휴전선)을 품고 있는 DMZ는 68년이 지났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고 한반도의 통일은 요원하게 되었다. 이 시점에서 DMZ를 논의하면서 미·소간의 38°선 획정, 남북한의 내전(內戰)인 6·25전쟁과 미·중 참전에 의한 확전으로 이어진 정전회담과 연관성을 찾지 않을 수 없다. DMZ의 산물인 6·25전쟁은 1년간은 전쟁, 2년간은 포로 문제로 거의 3년이 소요되었음에도 종전(終戰)이 아닌 휴전(休戰)으로 결과지어 졌다.

미소군정의 38°선 획정과 분단, 6.25전쟁 이후 휴전에 이르는 동안 한반도 상황은 한국군을 배제한 채 UN군·중국군·북한군에 의한 정전(휴전)협정, MDL, 남북으로 각각 2km씩, 전체 4km의 완충지대인 DMZ가 형성되었다. 궁극적으로 UN군과 공산측은 남북 간의 휴전으로

DMZ가 탄생하는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이었다. 그 결과는 종전되지 못한 휴전, 아직도 한반도는 미완의 전쟁상태로 남아있으며 한반도 통일의 장애물인 미완의 결정체가 DMZ인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미·소군정의 한반도 분단과 38°선 획정, 그리고 6.25 전쟁 등을 소환하여 MDL과 DMZ의 역사적 근원을 고찰하는데 근본적인 연구의 목적을 지닌다. 연구 시기는 1945년 해방전후부터 1953년 MDL(휴전선)과 동시에 DMZ 형성 등의 시기에 해당된다. 다만 북측의 DMZ는 자료 접근의 한계도 있어 이 글에서는 남측의 DMZ를 중심으로 하고 북측 DMZ는 부수적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이 글이 시의성을 갖는 이유는 2021년 9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뉴욕 UN본부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 II. 기존 연구 경향 및 연구방법

### 1. DMZ 관련 기존 연구 경향

DMZ 관련 기존 연구 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척도는 KCI 국내 학술지 인용색인에 있다. 2021년 7월 31일 현재 KCI 인용색인에서 DMZ 관련 검색 논문은 총 495건이었다. 그중에서 인용 밀도가 많은 우선순위를 첫 페이지로부터 상위 200건을 표본 삼아 DMZ 관련 논문을 검색하였다. 200건 중 KCI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연도별 논문 수는 2018년에 12건, 2019년 32건, 2020년 16건, 2021년 13건이며, 2018년 이하에는 127건이 등록되었다. 그러니까 2019년도의 연구 건수는 다른 연도에 비해 많았으나, 그 외 연도는 대략 평균 14건의 연구 실적을 보여주었다. DMZ 관련 논문이 특정 학문을 위한 것만은 아닌, 융합연구나 통섭학문의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가 활기를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한반도가 휴전(정전)체제이다 보니 학술 연구의 제한된 측면, 폐쇄적인 북한과의 대립적 측면, 왕래가 거

의 없다는 소통 부재로 연구의 열기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200건을 표본 삼아 DMZ와 관련한 논문의 키워드는 28개(179건, 89.5%)로 정리하였고, 활성화되지 않은 분야의 연구는 기타(21건, 10.5%)로 묶어보았다. 즉 28개(179건)로 묶은 DMZ 관련 논문의 키워드는 식물 및 생태 32건(16%), 관광 26건(13%), 평화공원 15건(7.5%), 평화적 이용 14건(7%), 토지·지형·기후 및 지리공원 11건(5.5%), 공간적 특성과 범위 9건(4.5%), 자연유산 및 자원보전 9건(4.5%), 웹 및 문화콘텐츠 8건(4%), 판문점 및 남쪽 철책선 5건(2.5%), 관광 이미지 및 상품 4건(2%), 협력적 이용 및 거버넌스 구축 4건(2%), 효율적 관리 및 개발보존 4건(2%), 디지털 및 스토리텔링 4건(2%), 무장화 및 군사적 충돌 4건(2%), 답사 및 체험학습 3건(1.5%), 분단국 접경지역 연계 3건(1.5%), 연구방법 3건(1.5%), 국가사업 및 관리 3건(1.5%), 남북한 및 국제 평화구상 논의 3건(1.5%), UN사무국 유치 및 UN평화대학 설립 2건(1%), 전망대 및 냉전경관의 구성 2건(1%), 미래와 인문학 2건(1%), 주변 정주환경 및 주민소득 개선 2건(1%), 문화예술의 역할과 플랫폼 2건(1%), 종교 2건(1%), 정치적 이미지 1건(0.5%), 세계유산 등재 1건(0.5%), 북한의 전후복구 1건(0.5%) 등이다.

이상의 DMZ 관련 국내의 기존 연구 경향은 분단선을 포함한 민간인 통제가 되어 있는 장소로서 자연 그대로 보전되고 있다는 점에서 식물 및 생태 관련 연구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 순서로 볼 때 관광과 평화공원 및 평화적 이용으로서의 DMZ 관련 연구를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 DMZ가 휴전선을 중심으로 남북 각각 2km 떨어진 장소라는 점에서 광활한 지역에 대한 토지·지형·기후 및 지리공원, 공간적 특성과 범위, 자연유산 및 자원보전 관련 연구 순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장화 및 군사적 충돌이나 분단국 접경지역 연계, 전망대 및 냉전경관의 구성 등의 연구도 분단국인 남북한의 현실을 무시할 수 없는 연구이다. 특히 이채로운 것은 분단의 상징인 DMZ가 남북한 및 국제 평화구상 논의와 UN사무국 유치 및 UN평화대학 설립을 강조

하는 연구도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DMZ 관련 기존 연구 경향은 DMZ가 설정되고 분단 76년을 맞는 시점에서 그에 관한 역사적 배경과 안보적 논의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물론 분단 한반도 연구나 DMZ 연구가 통일을 대비한 통일 이후의 연구이다 보니 다양한 학문적 관점에서 융합적 연구의 대상이기도 하다는 점을 간과하고자 한 것은 아니다. DMZ를 통일이 요원한 상태에서 북한을 배제하고 단순히 남한의 관점에서만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연구에 집착하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분단국가로 통일을 갈구해야 하는 입장에서 남북한이 적대적 관계이기 때문에 DMZ를 장밋빛으로만 보아서도 안 될 것이다. 남북한 주민들이 왕래할 수 없는 장벽으로서의 DMZ가 해결되기 위한 노력과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입장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DMZ가 초래한 역사적 실타래를 풀려는 노력은 결국 분단과 DMZ에 대한 역사적 인식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글은 DMZ 연구에 있어 분단과 역사적 인식에 초점을 두고 전개해 나갈까 한다.

## 2. 연구방법

DMZ 관련 기존 연구 경향은 주지하듯이 1953년 DMZ가 설정되고 분단 76년을 맞는 시점에서 DMZ 관련 역사적 배경과 안보적 논의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한계를 안고 있다. 이 점에서 이 논의는 DMZ 탄생의 역사적 고찰을 통해 DMZ의 해법을 찾고자 한다. 이 연구방법은 DMZ 연구를 미·소의 38°선 획정과 분단 및 6.25전쟁과 정전회담 등 역사적 인식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를테면 일제(日帝)의 패망과 더불어 동아시아에 깃들인 냉전은 UN군의 일원인 미국과 소련의 담합에 의한 한반도에서의 38°선 획정과 분단, 맥아더의 일반명령 제1호에 따른 결과적 현상이었다. 이에 따른 역사적 고찰은 ①‘북위 38°도 이남(以南)의 조선에 미군 정령과 이북(以北)의 조선에 소군 점령’에 의한 남북한 체제 및 이데올로기의 대립, ②북한의 기습남침에 의한 도발적

6.25전쟁의 발발과 미군을 위시한 UN군의 참전과 중국군의 참전으로 국제전 비화, 그리고 ③전쟁과정에서 발생한 남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 문제 논란 종식과 MDL(휴전선)의 설정과 더불어 휴전협정에 따른 38°선의 MDL 대체 등에 국한하고자 한다. 그 결과 남·북 MDL을 중심으로 '남방한계선'(SLL, Southern Limit Line)과 '북방한계선'(NLL, Northern Limit Line)의 존재는 MDL(휴전선)을 중심으로 남북 공히 4km의 완충지대로서 DMZ가 있어 한반도 입장에서 통일보다는 분단을 공고화시키는 요체가 되었다.

### Ⅲ. DMZ 탄생의 역사적 난제들

#### 1. 38°선 획정의 소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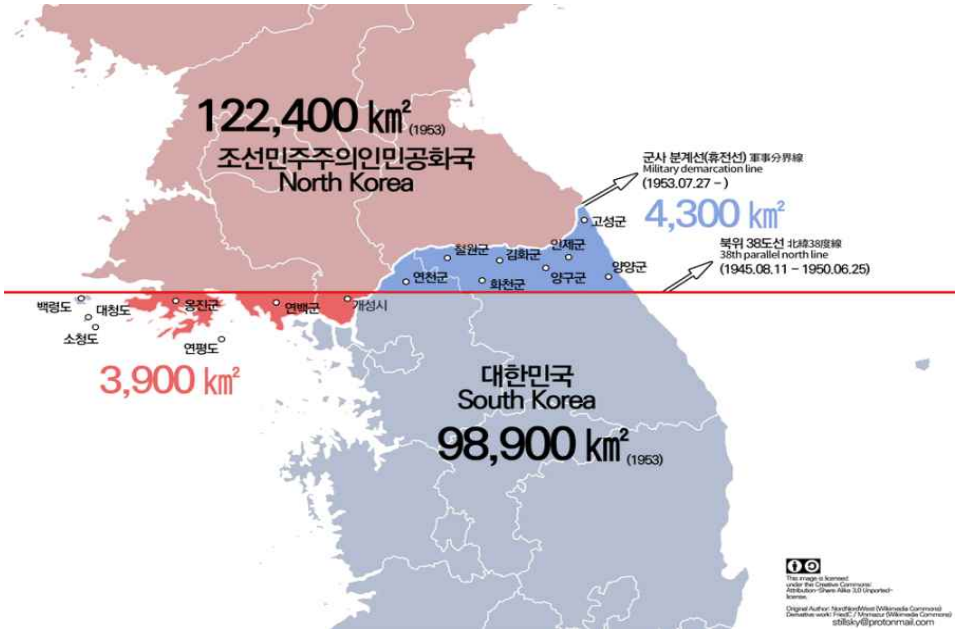
미·소군정이 한반도에 38°선을 획정하여 남북한을 분할 점령한 것은 한반도 분단이 공고화된 계기였지만 한민족 구성원의 의지와 무관하게 외세가 결정해 놓은 악수(惡手)였다. 이들로 말미암아 약소국인 한반도는 동서이데올로기의 대립장이 되었고 한반도 내전의 국제전으로 비화 되기에 이르렀다. 이 점에서 외부세력의 38°선 획정은 한반도가 통일되기보다는 분단의 상수가 돼 DMZ로 남아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외부세력의 38°선 획정<sup>3)</sup>이 6.25전쟁과 휴전, MDL과 DMZ로 점철된 바, DMZ 문제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분단과 전쟁을 야기시킨 요인들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

3) 38°선이 획정된 과정과 시기에 관해 크게 두 가지 주장이 대립되고 있다(김광식 1985, 112-125).



&lt;그림 1&gt; 통한의 38°선과 MDL(휴전선)



출처: <https://blog.naver.com/cpath/222420254747> (검색일: 2021/07/13).

열강들의 38°선 획정은 제2차 세계대전 패망국인 일본의 분단을 회피하면서 겨안는 대신에 한반도의 분단을 기정사실화 한데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한반도 분단은 이데올로기와 정치체제가 다른 분단국가를 잉태하여 결국은 6.25전쟁, 그리고 휴전선인 MDL, 그리고 DMZ 등으로 고착화 되어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난제로 비화된 점에 틀림없다. <그림 1> 통한의 38°선과 분단의 고통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왜 38°선이 획정이 일본의 무조건 항복, 미국 '3성조정위원회'(SWNCC, State-War-Navy Coordinating Committee)의 결정, 소련의 부동항 점령의 산물인지는 결자해지가 없는 난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에 대한 미국과 소련의 입장이 명확한 해명이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랜 기간 동안 한반도 분단이 고착화된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첫째, 38°선 획정은 UN군에 의한 1945년 8월 6일 일본의 히로시마

(広島)와 8월 9일 나가사키(長崎) 등의 원자탄 투하로 패망을 앞둔 시점에서, 일본이 포츠담선언의 수락의사를 미국 측에 통보한 1945년 8월 10일을 기점으로 항복의사를 표시하기 위해서였다(정태일 2020, 102-105 참조). 소련이 8월 8일 일본에 선전포고를 한 것은 얄타회담의 결과에 따른 것이었지만, 소련이 만주의 일본군을 전멸시키기 위해서 북한의 웅기, 나진, 청진 등 여러 부동항(不凍港)을 점령해야 한다는 스탈린(J. Stalin)의 주장에 미국이 동의했기 때문이었다. 미(美)국무성에서 8월 10일과 11일 사이의 급박한 정세 속에 한반도에서 일본군의 8월 14일 무조건 항복 선언을 받는 즉시, 임시적인 MDL을 획정한 것이 바로 38°선이었다. 결국 일본의 UN군에 항복의사와 더불어 UN군이 획정한 38°선은 일본의 항복을 받는 책임의 편리한 할당에 불과했으며, 이러한 임시적 MDL이 한반도에서 영구분단선으로 현실화되었다(정주신 외 1993, 21-23; 정주신 2011, 17).

둘째, 한반도 점령지역 할당을 가져온 38°선 획정은 일본이 항복의사를 표명함과 동시에 미(美)국무부의 국무성, 육군성, 해군성으로 구성된 SWNCC의 결정에 의한 것이었다. SWNCC는 본래 제2차 세계대전의 수행과정에서 정치 및 군사전략을 조정할 목적으로 구성되었으나 일본의 갑작스런 항복에 따라 여기에서 38°선을 제안하게 되었다. 육군성의 본스틸(C.H. Bonesteel) 대령과 러스크(D. Rusk) 대령이 미국 국무차관 던(C. Dunn)의 지시로 한반도를 어디서 분할할 것인지를 보고받으면서도 38°선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수도 서울을 미군의 점령지역 내에 포함되도록 38°선을 제안했던 이 초안은 일반명령 제1호안<sup>4)</sup>으로 결정

4) 1945년 9월 2일 '일반명령1호'로 명명된 연합군진주지역의 분담 결정은 다음과 같다(매일신보 1945/09/03). 이날 조인한 항복문서에 대하여 일반명령 제1호(육해군)가 공포되었다. 이에 의하면 일본본토를 위시해서 만주, 조선南方, 각 지역의 연합군 점령지역 분담이 다음과 같이 결정지어졌다. a) 미국군 점령지역-일본국토, 이에 인접한 諸島嶼, 북위 38° 이남의 조선, 琉球諸島 及 필리핀諸島, 小笠原諸島, 太平洋諸島의 日本國委任統治諸島, b) 영국군 점령지역-안다만諸島, 니코발諸島, 緬甸, 泰國, 北緯 16° 以南의 佛領印度支那, 말레이시아, 스마트라, 瓜哇, 小스나다諸島, 바리(론브크, 치몰을 포함), 부르, 세람, 안본, 가이, 알, 타로바루及 아라브海의 諸島, 세레베스제도, 하루마헤

되었다. 한국의 경우 38°선 이북(以北)의 일본군은 소련군 사령관에게 투항하고, 38°선 이남(以南)의 일본군은 미국군 사령관에게 투항하도록 되어 있었다. 결국 이 안은 8월 11일과 12일 양일간 미군 SWNCC에서 토의되고 8월 12일 합동참모회의에서 검토를 마쳤다. 8월 13일 트루먼 대통령의 결재를 얻어 8월 14일 일본군의 무조건 항복 당시 마닐라에 있었던 태평양전쟁 미군 최고사령관 맥아더에게는 8월 15일, 소련 수상 스탈린에게는 8월 16일 전달되었는데, 38°선과 관련되는 조항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도 제기되지 않은 채 한반도 분할선으로 확정된 것이다(정주신 외 1993, 22; 정주신 2011, 18).

셋째, 38°선에 관한 일반명령 1호가 검토 중인 8월 12일 소련군은 부동항(不凍港)을 얻기 위하여 한반도 이북(以北) 지역인 옹기, 나진을 경유하여 원산에 당도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련군은 8월 24일 평양에 입성하고 26일에는 38°선을 경계로 경원선과 경의선 철도를 차단하고 남북한 간의 통행을 폐쇄함으로써 북한 점령을 완료하였고, 미군은 9월 2일 맥아더 장군에 의해 일반명령 1호가 발표된 후 9월 8일 인천을 경유하여 9월 8일 서울에 진주(進駐), 남한 점령을 완료했다. 38°선을 경계로 미·소연합국의 한반도 점령은 결과적으로 한반도의 분단 상황을 만들어 남북한 두 정권이 이질적(異質的)으로 태동하는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정주신 외 1993, 22; 정주신 2011, 18).

요컨대 미·소 간 동북아의 패권과 이데올로기 장악을 위한 분단과 동맹국 형성을 목적으로 38°선 획정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그리고 6.25 전쟁과 정전협정의 부산물인 DMZ는 분단체제와 동맹국가를 공고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그동안의 연구는 38°선과 DMZ 문제를 연결시키지 못하고 DMZ조차 38°선과의 연계성을 다루지 않는 경향을 볼 수 있다. DMZ는 6.25전쟁의 부산물임에 틀림없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도

라諸島와 蘭印 뉴기니아, c) 호주군 점령지역-보르네오英領, 뉴기니아, 비스마르크諸島 及 소로몬諸島, d) 소련점령지역-만주, 북위 38° 이북의 조선, 樺太 及 千島諸島, e) 중국군 점령지역-支那(滿洲를 除함), 臺灣 及 北緯 16° 以北의 佛領印支那 등.

소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왜냐하면 38°선도, 6.25전쟁도, DMZ 형성도, 결국은 외세의 결정판이기 때문이다. 결국 한반도가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라는 이데올로기의 전쟁터로 자리매김 당한 것은 아직도 38°선, 6.25전쟁과 MDL(휴전선), DMZ가 난제로 남아있음을 의미한다.

## 2. MDL(휴전선)

MDL은 휴전의 발효와 더불어 6.25전쟁이 휴전되면서 성립한 '한국군 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휴전의 경계선을 의미한다. 즉 UN군과 공산군의 태세를 고정화시키거나 전선에서 병력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설정하는 기준선, 즉 휴전선<sup>5)</sup>을 의미한다. 이로써 미·소군이 점령할 당시 한반도의 분단선인 38°선은 6.25전쟁 이후 휴전선으로 대체되었고, 이 휴전선은 MDL의 기능을 수행한다. 휴전 당시에 MDL을 설정함에서 UN군과 공산군 양측의 주장이 대립되었으나, 양군의 현실적인 접촉선을 MDL로 결정함으로써 휴전협정이 성립되었다. 정전협정 제1조는 양측이 휴전 당시 점령하고 있던 지역을 기준으로 MDL<sup>6)</sup>을 설정하고 상호 간에 이 MDL선을 침범, 적대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MDL은 200m 간격으로 설치된 황색 표지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 1292개에 달하며 이 중 유엔사가 696개, 북측이 596개를 관리한다.

휴전선에는 MDL에서 남북쪽으로 설정된 DMZ의 '남쪽 경계선'(SLL)과 '북쪽 경계선'(NLL)이 공존하고 있다. SLL과 NLL 양쪽에 감시초소(GP, guard post)가 설치되어 있고, 감시초소에는 무장군인들이 남한의 민정경찰(DMZ Police)과 북쪽의 민경대(民警隊)가 상호 침범을 경

5) 휴전선은 전쟁 이전의 38°선에 비해 서해안의 웅진군이 북한으로, 그리고 중동부의 철원·금화·화천·인제·고성군의 일부가 남한으로 넘어온 채 다시 국경 아닌 국경선이 되어 국토를 분할하고 있다.

6) 한편, 백범 김구 선생이 휴전선 설정 전에 MDL을 통과하였고, 지난 2007년 10월 2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MDL을 직접 걸어서 넘어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다. 또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MDL 앞에서 첫 만남을 가지면서 남북 정상 첫 MDL 조우가 이뤄졌다.

계하고 있다. 본래 DMZ의 감시초소에는 무장 군인이 주둔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DMZ지역에서 무장도발이 잦기 때문에 일정한 규모의 무장이 용인되는 상황이다.<sup>7)</sup>

<그림 2>에서 알 수 있듯이 한반도에 적용된 MDL 길이는 예성강과 한강 어귀의 교동도(喬棟島)에서부터 개성 남방의 판문점을 지나 중부의 철원·금화를 거쳐 동해안 고성까지 155마일(약 250km)에 이른다. 한반도 동서를 가로지르고 있으며, 동해안의 간성(杆城) 북방에서부터 서해안의 강화(江華) 북방에까지 이른다.<sup>8)</sup> 그리고 UN군과 공산군 양측은 MDL 후방으로 남북 양쪽 2Km의 대상지역(帶狀地域)은 DMZ와, 이를 적대행위(敵對行爲)의 발생 및 충돌 방지를 위해 완충지대 등을 설치한다. 이 이행여부를 국제적인 감시위원회에서 감시하거나 혹은 쌍방의 병력을 철수시킨 뒤에 UN군 등 제3자가 현장에 주둔해서 감시하기도 한다.

<그림 2> DMZ의 MDL과 북방한계선(NLL) 및 남방한계선(SLL)



DMZ 비무장 지대, 2011

- 7)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b25h3487a> (검색일: 2021/03/20).  
 8) MDL과 DMZ를 접하는 북한과의 접경지역은 연안군, 배천군, 재풍군, 개성시, 장풍군, 철원군, 평강군, 김화군, 창도군, 금강군, 고성군이 있으며, 남한과의 접경지역은 강화군,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이 있다.

출처: © (주)천재교육 | BY-NC-ND: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24XXXXX65644> (검색일: 2021/02/23).

<그림 3> 정전 협정 체결(1953.07.27)



출처: 두산백과, <http://www.doopedia.co.kr> (검색일: 2021/02/24).

### 3. 정전협정(휴전협정)

정전협정의 정식 명칭은 "UN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북한군 최고사령관 및 중공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다. 1950년 6·25전쟁 발발 뒤 1년 동안 지리한 전쟁이 계속되는 부담 속에 UN군<sup>9)</sup> 측과 공산군<sup>10)</sup> 측은 비밀접촉을 거쳐 1951년

9) UN군 측 휴전회담 대표는 수석대표 해군중장 조이(C.Turner Joy): 극동지구 미 해군사령관, 대표 육군소장 호데스(Henry I.hodes): 미8군 참모부장, 대표 해군소장 버크(Arleigh A.burke): 극동지구 미 해군참모부장, 대표 공군소장 크레이기(Lawrence C.Craigie): 극동지구 미 공군부사령관, 대표 육군소장 백선엽(白善燧): 한국군 제1군단장 등이다.

10) 공산군 측 휴전회담 대표는 수석대표 육군대장 남일(南日): 북한군 총참모장 겸 부수상, 대표 육군소장 이상조(李相朝): 북한군 정찰국장, 대표 육군소장

7월 10일 개성(開城)에서 첫 정전회담을 개최하였다. 그리고 1년이 지난 1952년 7월 개성에서 본회담 시작과 10월 회담 장소를 판문점으로 변경 등 9개월 간 회담은 전쟁포로 문제 등이 산적하여 중지되었다.

그 후 2년만인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UN군 총사령관 클라크(M.W. Clark)와 북한군 최고사령관 김일성(金日成),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관 평덕하이(彭德懷) 등이 최종적으로 서명함으로써 6·25전쟁이 휴전되며 MDL과 DMZ 등의 규정을 담은 협정<sup>11)</sup>이 체결되었다(<그림 3> 참조). 공산 측과 UN군 측에서 쌍방 최고사령관 대신 쌍방의 수석대표가 먼저 서명한 후 서명된 문서를 각자의 사령부로 보내 그곳에서 양측의 최고사령관이 서명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김형섭 역 1981, 484). 그러나 처음부터 '정전 반대' 입장이었던 한국 측은 당시 공산 측이 한국군 대표의 입장 불가와 취재기자 배제를 주장함에 따라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되지 못했다.

정전협정에 의거, 휴전선은 서울에서 서북으로 48km되는 곳이며 북으로 동경126도 57분, 남으로 동경126도42분, 북위37도59분, 남으로 동경126도42분, 북위37도55분에 한반도를 남북으로 가로지르고 있다(<그림 1> 참조). 이 협정으로 인해 남북은 적대행위는 일시적으로 정지되지만 전쟁상태는 계속되는 국지적 휴전상태에 들어갔고, 남북한 사이에는 DMZ<sup>12)</sup>와 MDL이 설치되었다. 또 UN군과 공산군 장교로 구성되는

장평산(張平山): 북한군 제1군단 참모장, 대표 육군소장 덩화(鄧華): 중공군 제15 집단군사령관, 대표 육군소장 세항(解方): 중공군 북동군관구 선전주임 등이다.

11) 한국전쟁 정전 협정 내용은 서언과 전문 5조 63항, 부록 11조 26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 서언은 협정의 체결 목적·성격·적용, 1조는 MDL과 DMZ, 2조는 정화(停火) 및 정전의 구체적 조치, 3조는 전쟁 포로에 관한 조치, 4조는 쌍방관계 정부들에 대한 건의, 5조는 부칙, 부록은 중립국 송환위원회 직권의 범위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1953년 6월8일, 조기 종전을 위한 UN군 측의 대폭적인 양보인 UN군·공산군 양측간의 포로송환문제가 2년 만에 타결됐다. 즉 주요 내용은 송환을 원하는 포로들은 2개월 내에 맞바꾸고 송환을 거부하는 포로들은 5개국(체코·폴란드·인도 등)으로 구성된 '중립국송환위원회'가 4개월 동안 이들의 귀환을 설득한다는 것이었다. <https://blog.naver.com/tryxtry/222396441676> (검색일: 2021/04/21).

12) 최초로 공산군 측은 6.25전쟁 이전의 대치선인 38°선을 군사경계선으로 하고 남북 각10km 지역을 DMZ로 설치할 것과 단기간 내에 외국군대를 철수시킬

MCA 본부가 판문점에 설치되고, 스위스·스웨덴(UN군 측)·체코슬로바키아·폴란드(공산군 측) 등 4국으로 구성된 NNSC가 설치되었다. 또한 남한지역의 '민간인 통제선'(민통선)은 MDL로부터 15km 범위 안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MDL 남방 25km 내에 설정되었으며, 북한지역은 남측의 민통선과 유사한 개념의 '여행금지구역'이 NLL로부터 약 20km 범위의 지역으로 설정하였다(김재철 2011, 33). 이후 유일한 분단국으로 있는 한반도는 2021년 현재 국제 관례상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7년이 지났지만 이 공고화된 협정 체제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

정전협정은 UN군과 공산군 측 쌍방 간의 분쟁 발생 시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근거로 한반도에서 67년간 계속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정전협정 이행 주무부서는 MAC이다. 한국정부가 MAC에 한국군 대표를 참석시키지 않았던 이유는 처음부터 정전협정 반대 입장을 고수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6.25전쟁 전후처리 문제에서 한국군 참여가 불가피함에 따라 미국 정부와 UN군사령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한국도 뒤늦게 MAC에 대표를 파견하게 되었다. 그 후 북한 측이 MAC에서 대미(對美) 비방공세를 강화하면서 오히려 대표 수를 늘리는 동기가 되었다. 예컨대 1964년 6월부터 '한국군 수석대표'와 '차석대표' 2명이 MAC에 참가하게 되면서 미군대표를 줄이는 대신 한국군 대표를 1명을 더 추가시키게 되었다.

북한은 1974년부터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줄곧 정전협정 서명에 참가하지 않은 한국을 제외하고, UN군 사령관인 미국이 협정에 서명했으므로 평화협정 역시 정전협정 당사국인 미국과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 왔다. 반면 한국은 6·25전쟁의 주된 교전 당사국으로서 실질적인 평화협정 당사자라는 주장으로 맞섬으로써 이 문제가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대체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어 왔다. 정전체제가 무력화된 이후 북한은 한국을 배제하고 북미 간 공동군사기구

---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MDL 및 DMZ'의 설정에 관한 토의는 1951년 7월 26일 제10차 회담부터 시작되어 만 4개월 후인 동년 11월 27일에 합의를 보게 되었다.



를 제안하는 등 통미봉남(通美封南) 정책을 구사해 왔다.

1990년대 초부터는 북한 역시 NNSC를 부정적으로 보고, 체코슬로바키아의 분리에 따라 체코 대표단을 강제로 철수시켰으며, 1995년도에는 폴란드 대표단마저 강제 철수시켰다(국방부 1998, 101).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북한은 정전협정관리기구인 MAC의 불참과 NNSC를 강제 철수시킴으로써 결국 한반도의 정전체제는 무력화되고 말았다. 그러나 UN군 측에서는 비(非)상주로 그 역할을 유지하는 이유는 아직도 MAC를 유지하고 있음은 물론 분기1회 개최되는 NNSC의 정기회의가 개최되고 있기 때문이다.

1991년 3월 한국군 장성이 MAC 수석대표로 임명되고, 1992년 4월과 12월에 북한과 중국이 각각 MAC에서 철수하면서 협정 조항은 거의 유명무실해졌다. 이에 따라 남북한은 물론, 미국 등 이해 당사국 사이에 정전협정 대신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1997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교전 당사국인 남북한과 미국·중국 대표들이 모여 4자회담을 열었으나 성과는 없었다. 이후 MAC 회의는 유명무실한 존재가 되고 만 것이다.

이에 UN군사령부는 정전협정 체제를 재가동시키기 위해 UN군사령부와 북한 간 장성급 회담을 북한에 제의하여 1998년 6월부터 MAC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sup>13)</sup> 이는 북한이 UN군사령부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북미평화협정 체결을 모색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13) 1998년 6월부터 2002년까지 유엔사와 북한간의 장성급회담은 총 14차례 걸쳐 개최되었다. 그러나 2010년 3월 26일 21시 22분경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해군 제2함대 소속의 초계함 천안함(天安艦)이 북한에 피격된 채 침몰한 천안함사건(승조원 104명 중 46명 전사, 58명 구조) 이후 본회담 개최를 위해 노력했으나 북한은 '검열단 파견' 주장을 반복하면서 결국 본 회담에는 응하지 않았다.

#### 4. NLL(북방한계선)

육상의 NLL은 본래 휴전 당시 남북 양측이 대치해 있던 MDL에서 북쪽으로 2km 물러난 지역에 설정된 북측의 한계선으로, 남쪽의 SLL과 마찬가지로 이 선(線)의 남쪽 2km 구역 안에는 출입이 통제된다. 즉 남북 양측의 한계선 밖 4km 이내에는 출입이 통제되는 완충지대로서, 이 공간이 바로 DMZ다. 그러나 군사 전력상 상대국을 감시하기 쉬운 장소로 각종 시설들을 이동시키면서 남측과 북측 한계선 안의 '전초(前哨)'인 'GP' 사이의 거리가 가까운 곳은 800m밖에 되지 않는 곳도 있다.

1953년 7월 27일 이루어진 정전협정에서는 남북한 간 육상경계선인 MDL만을 설정하고 경계가 모호한 해양경계선을 설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당시 주한UN군 사령관이던 클라크(M.W. Clark)는 1953년 8월 30일 남북 간 MDL 설정이 모호했던 동·서 해상 두 지역에 대한 우발적 무력충돌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한반도 동·서 해역에 NLL을 제시해 설정하였다. 1953년 설정 이후 1973년 10월 이전까지는 북한도 이 NLL에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준수하여 실질적인 해상경계선 역할을 함으로써 남북 사이에 별다른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첫째, 서해상의 NLL은 당시 국제적으로 통용되던 영해 기준 3해리에 입각하여 제시하였다. <그림 4>에서 알 수 있듯이 해양의 NLL은 남한 해역 서해 5개 도서(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 북단과 북한 측에서 황해도 지역을 관할하는 옹진반도와와의 중간선(북위 37도 35분과 38도 03분) 사이에 해당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둘째, 동해상의 '북방경계선'(NBL, Northern Boundary Line)은 MDL 연장선을 기준으로 하여 설정하였고, 그 후 1996년 7월 1일 동해상의 NBL을 NLL으로 명칭을 통일하여 지금에 이르렀다.

<그림 4> 북방한계선과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경계선



출처: <http://blog.naver.com/lckhds/60188842852> (검색일: 2021/03/14).

그러나 북한은 1973년 10월 이후 남한 연해 서해 5개 섬 주변수역이 북한 연해라고 주장하면서 이 수역을 항행 시 사전 승인 허가를 요구하는 한편, 빈번히 NLL을 넘어 남한 해역에서 남한 함정들과 맞닥뜨리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1977년 7월 1일 북한은 이른바 '200해리 경제수역' 설정 뒤, 8월 1일 '동해에서는 영해의 너비를 짤 때 기준으로 삼는 해안선인 기산선(起算線)으로부터 50마일, 서해에서는 경제수역 경계선'으로 하는 '해상 군사경계선'을 일방적으로 설정하였다. 또 1999년 6월에 서해 연평해전(延坪海戰)을 일으킨 뒤 9월에 '조선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선포하고 2003년에는 '서해 5개 섬 통항질서'를 발표하는 등 끊임없이 NLL의 무효를 주장하고 무력 도발을 일으키고 있다.

NLL이 국제법상 영해를 규정하는 경계선이라는 해석에 대해서는 국제법 학자들에 따라 견해를 달리하지만, 한국정부는 북한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1991년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 제11조의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MDL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즉 NLL 확정에 대해 UN군사령부

가 통보했을 당시, 북한 측은 분명한 이의 제기가 없었고 20여 년간 관행으로 준수해 왔다. 다만 이를 침해할 경우 명백한 정전협정 정신 위반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 IV. DMZ의 상황과 난제의 해결방안

### 1. DMZ 상황의 실제

주지하듯이 6.25전쟁 때 UN군과 북한 공산군이 휴전을 전제로 한 MDL과 이 선을 중심으로 남북 각 2km씩 너비 4km의 DMZ를 설정할 것을 합의하고 1950년 11월 27일 확정, 발표하였으나 30일 이내로 휴전이 성립되지 않아 무효화하고 말았다. 그 후 2년 6개월만인 1953년 7월 27일에 ‘한국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됨으로써 MDL이 확정되고 이에 따라 현재의 DMZ가 설정되었다. 이처럼 6.25전쟁이 내전으로 종식되지 못하고 1951년 중국군 개입으로 1.4후퇴가 불가피한 상태에서 1951년 7월 10일 개성(開城) 첫 정전회담에 이어 1952년 7월 개성 본회담 시작과 10월 회담 장소를 판문점으로 변경하는 등 UN군과 북한 공산군과의 의제 차이로 DMZ 설정이 늦어졌다.

DMZ에는 한국의 휴전협정에 의해서 군대의 주둔이나 무기의 배치, 군사시설의 설치가 금지됨으로 남·북 MDL을 중심으로 활동반경과 넓이·폭의 지대가 의무적으로 결정되었다. 즉 DMZ는 그 당시 남북 군대가 맞닿은 MDL에서 남북으로 폭 각각 2km(총 4km)와 동서횡대 넓이 구간을 155마일(약 250km)에 이르는 총면적은 903km<sup>2</sup>(북측 DMZ 면적은 478km<sup>2</sup>, 남측 DMZ 면적은 425km<sup>2</sup>)로 구축되었다. 다만 휴전선(MDL) 자체는 흔히 생각하는 것과 달리 베를린장벽처럼 방벽이나 철책(철조망)이 아닌 팻말로만 되어 있다. 그 대신에 남북으로 폭 각각 2km(총 4km)에는 대인지뢰를 동반한 철책으로 되어 있다.

<그림 5>의 DMZ 개념도를 살펴보면, 휴전선(MDL)을 중심으로 남북

으로 2km 씩 폭으로 남방한계선과 북방한계선이 표시되며 DMZ의 중간부분에 위치한다. MDL은 한반도 허리 부분인 서쪽의 임진강에서부터 동해안까지 1,292개의 표지석으로 구분된다. 다만 남쪽 지역에는 남방한계선에서 5~15km 지역에 민간인통제선을 설치하여 농사짓는 것 외에는 민간인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한편 <그림 6>처럼, 특이한 것은 MDL 북측 지역 북방한계선에 철책이 없는 것은 남한 쪽 남방한계선 내 철책이 설치된 것과 다르며, 북쪽 MDL 인근에 북한철책과 북한 전기철책이 2중으로 놓여 있다는 점이다.

<그림 5> 비무장지대 개념도



출처: <https://namu.wiki/w/비무장지대> (검색일 2021/02/18).

DMZ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감시하기 위해서 상례적으로 국제감시단이 파견되었다. 한국에서는 1953년 8월의 '민간인의 DMZ 출입에 관한 협의'에 근거하여 DMZ에 한국주민 거주지 '자유마을'과 북한주민 거주지 '평화마을'이 있다. 그리고 민사행정이나 구제사업을 위하여

군인이나 민간인이 DMZ에 들어가려면 MAC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총인원은 1,000명을 넘지 못하고 무기를 휴대할 수 없다. 또한 MAC의 특정한 허가 없이는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도 MDL을 넘지 못한다.

<그림 6> 비무장지대(DMZ) 구조



출처: <https://namu.wiki/w/비무장지대> (검색일 2021/02/18).

판문점은 MAC와 NNSC이 함께 있는 쌍방 '공동경비구역'(JSA, Joint Security Area)의 DMZ로서 쌍방의 경비병이 MDL을 자유로이 드나들었으나 1976년 8월 18일 북한군의 도끼만행사건<sup>14)</sup> 이후 금지되고 있다. 정전회담에서 결정된 MDL, 즉 휴전선으로부터 SLL과 NLL 사이의

14) 판문점 JSA 내 북한군과 UN군의 왕래가 자유롭게 오가던 상태에서 한국군 초소의 시야를 가리는 미루나무의 가지치기를 하던 미군과 한국군을 북한군이 기습 침격하여 미군장교 2명 사망과 9명 중경상을 입힌 사건으로, 당시 남북한은 준전시 상황까지 이르렀다.

4km의 지대와 그 주변에는 주로 남북한 및 UN군과 북한군의 군대 간에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양측 다 철조망 등의 장벽을 세우고 각종 대인 및 대전차지뢰가 매설되어 있다. 1999년 9월 국방부가 제출한 국감자료에 의하면 남한지역에는 약 105만 여개의 지뢰가 매설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북한지역에는 남한 쪽보다 7배에 해당되는 약 750만의 지뢰가 있다(장용운 2005, 23-24).

DMZ는 충돌을 막기 위한 완충지대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DMZ 안에서나 DMZ를 향해서는 어떠한 적대 행위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동안 한반도 DMZ에서는 지금까지 수많은 크고 작은 정전협정 위반사항이 발생하였다. 이는 북한의 불참으로 인해 야기된 MAC의 기능이 마비된 사실도 하나의 원인이지만, 위반사항에 대한 강제규정 및 방법에 대한 제도화가 미흡했던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990년대 중반 이전에도 MAC가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바 북한의 위반사례는 수없이 많았다. 한 자료에 의하면 1953년 7월부터 1999년 6월까지 동 기간에 북한의 위반사항은 약 43만 여건에 비해 북한은 단 3건만을 인정하였고, 반면 북한이 주장한 한국군 위반사항은 약 84만 여건에 비해 남한은 16건만을 인정하였다(제성호 2000, 103-105). 지금까지 양측은 정전협정 위반사항에 대해 평행선만 오고 가는 양상을 보여 왔던 것이다.

한편 DMZ는 이처럼 출입이 제한적이고 금지되는 지역이지만 특히 MAC와 NNSC이 있는 판문점 구역은 쌍방이 공동으로 경비하는 DMZ 안의 특수지역이다. 판문점(Panmunjeom)의 JSA는 UN측과 북·중 공산측이 1953년 10월 MAC의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설치한 곳으로 이 지점을 통과하는 MDL을 중심으로 동서 800m 남북 400m의 원형지역에 위치해 있다. JSA는 경기도 파주시 진서면, DMZ 내의 MDL 상에 있는 구역이며, 휴전선 내 유일한 유엔·북한 JSA으로서 남·북한의 행정관할권 밖에 있다. 북한 행정구역상으로는 개성직할시 판문군 판문점리에 해당한다.

그러나 1976년 8월 18일 북측의 도끼만행사건이 발생한 이후 양측 군인들 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이 지역 내에 MDL을 표시하고 같은 해 9월 16일부터 이를 경계로 양측이 각각 분할경비를 맡게 되었다. JSA의 남측 경비임무는 휴전협정 이후 UN군사령부 경비대대에서 맡았다. 1971년 9월 20일 열린 남북적십자 예비회담을 계기로 MAC의 회담장소로 활용되어 왔다. JSA가 설치된 이후 쌍방 MAC 관계자들은 구역 내에서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었다. 2003년 7월 미국은 JSA 경비 책임을 한국에 넘기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2004년 10월 31일부터 한국군 JSA부대가 이를 담당하고 있다. 이후 2008년에는 모든 미군 시설이 철수하고 전권이 한국군에 넘겨졌다.<sup>15)</sup>

## 2. DMZ 난제의 해결방안

여기서는 DMZ 난제의 해결방안을 몇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개선하고자 한다. 이는 DMZ 해결이 역사적 근거 의해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심정으로 보고자 하는 까닭이다.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한반도의 분단은 6.25전쟁이라는 내전도 있었지만 38°선 분단과 6.25전쟁, 전쟁 이후 MDL(휴전선)과 DMZ으로 내몰리기까지 외세에 의해서 분할되고 획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외세가 한반도를 갈라냈다고 하더라도 한민족이 공생하겠다는 의지만 있었더라면 그렇게 분단과 분열이 공고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DMZ 난제의 해결방안을 약속하고자 한다.

첫째, DMZ를 한반도 역사가 살아 있는 토론의 공간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DMZ는 용어만 38°선, MDL로 바뀌었을 뿐 공론의 장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했다. 그러나 역사가 웅변하듯이 38°선 획정과 MDL 결정, 6.25전쟁 정전회담 등은 회담의 산물이라고 했을 때 그 전통을 이어받아 DMZ를 한반도 미래를 논의할 토론의 장으로 육성하는

15)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201XXX1811057> (검색일: 2021/02/21).



것이다. 문재인 정부시기 남북정상회담(문재인-김정은)과 북미정상회담(김정은-트럼프)의 장소이기도 한 판문점 등이 그곳에 위치하는 만큼 향후 평화와 통일 및 국제사회의 모든 현안을 토의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남북 및 미국·중국·러시아·일본 등 6자회담도 비무장화로 평화의 공간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한 판문점에서 보다 편리하게 회담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북한이 핵 고수 시 DMZ 해결이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전 한반도 평화를 위한 6자회담이 다시 개최되어야 할 것이다. 6자회담은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협의체로 상존해야 할 것이다. 6자회담은 북한과 미국 사이의 이러한 대립 구도 속에서 북한의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에 평화 체제를 구축하자는 차원에서 제안된 것이다. 1차 회담은 2003년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열렸다. 이후 2007년 9월의 회담까지 모두 6차례 열렸는데, 모두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이를 정례화하고 좀더 남북한 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은 물론 한반도 통일을 위한 모멘텀(momentum)과 국제사회의 힘(power)을 DMZ를 통해 풀어내야 할 것이다. 한반도의 38°선 분단과 6.25전쟁, 전쟁 이후 MDL(휴전선)과 DMZ 형성은 미국·중국·러시아·일본 4국과 무관하지 않겠지만, 이들이 한반도의 난제들을 풀어가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셋째, 남북한 주민들의 통일노력이 꿈틀대야 할 것이다. 독일 통일 과정에서 동서독 주민들에 의한 통일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한반도 통일은 외세나 서로 다른 체제에 의해서 이뤄지기보다는 남북한 주민들의 몫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김현정 2020. 188; 정주신 2020b, 168; 정주신 2021a, 273-274). 그동안 통일은 강력한 외세의 힘에 의존하는 경향이 농후하였다. 그러나 독일 통일에서 알 수 있듯이 전승4국의 힘이 존재하는 한 독일 통일은 어렵다고 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통일은 전승4국이나 동서독 정상회담으로 통일을 이뤄내지는 못했다. 동서독 통일이 동서독 주민들에 의해 통일되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롤모델로 삼아 한반도의 통일은 한민족이 주체가 되어

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한 주민들이 통일에 대한 열정을 담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므로 DMZ는 현재로서는 남북한 주민에게는 미지의 DMZ에 가려진 광활한 분단의 공간이지만, 남북한 주민들이 용기 있게 통일을 나눌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탈바꿈되어야 한다.

넷째, 이제는 북한 주민이 북한 내의 민주화 의지와 분단 극복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정주신 2020c, 33; 정주신 2021a, 276). 디지털 세상에 폐쇄적인 국가는 북한 이외에는 없다. DMZ도 닫혔고 인적·물적 교류도 막혔다. 북한도 북한주민을 정권의 도구로서 체제 속에 꽂꽂 묶어 둘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내놓아야 한다. 동서독 분단과 베를린장벽의 분단이 지리적·영토적 전승4국에 의해 획정되었다 할지라도 인적·물적 교류는 있었다. 온 세상이 협력과 교류를 통해 국가의 이익과 주민의 삶의 질에 매진함에도 북한은 폐쇄체제를 굳건히 하고 있다. 이제는 북한이 달라져야 할 것이고 북한 주민에게 자유를 허락해야 할 때임을 북한 당국은 명심해야 한다. 아무리 폐쇄체제 하의 북한이 남북한과 주변국가와의 교류 없이 차단되었음에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감염증’(COVID-19)은 북한을 강타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북한의 변화와 통일 희망을 갖는 열정이 북한에 전파되어 북한도 인터넷과 디지털 및 SNS로 탈바꿈한 세계가 되어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기 힘들 것이다. 북한 주민도 핸드폰을 사용하는 일이 많을 것이다. 이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 주민들과 통화하는 세상이니 북한정권에 의해 정보가 차단되고 있다고는 하나 결코 그렇지 않은 아닐 것이다. 차제에 북한주민이 먹고사는 문제는 인간의 본질이다.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의지를 북한주민들이 떳떳하게 북한 독재자에게 말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이 DMZ에서 남한 주민과 통일을 얘기하는 세상에 나와야 할 것이다.

다섯째,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생활이 북한주민을 위한 길임을 강조하고 통일 파이를 키워야 할 것이다. 현재 북한에서 탈북 해 와 남한에 살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수는 3만4천여 명이 된다. 이들은 남한에 와

서 정보당국의 탈북에 대한 조사 후 하나원을 거쳐 자신들이 원하는 지역에 가서 살고 있다. 이제는 우리 주변에서도 북한이탈주민들이 자신들의 삶을 위해 직장을 구하고 인간다운 삶을 개척해나가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북한 주민의 반사체가 될 것이다. 남한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북한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한반도 하늘에서 공존하고 있다. 비록 지역이 다를 뿐 정보와 소통이 가능한 것은 한민족이라는 점과 한글을 쓰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DMZ는 북한 주민과 남한에 살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서로 오갈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몇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은 통일의 기대와 장밋빛이 많았으나, 이제는 정상회담의 환상을 깨야 할 것이다(정주신 2020a, 147; 김강녕 2020, 237; 정주신 2021b, 223-224). 남한의 경우 북한보다 경제성장률과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워 북한 체제와 이데올로기를 극복하리라 생각하지만, 북한은 3대세습을 확고히 하면서 체제유지를 꾀하므로 남한이 기대하는 통일은 요원함을 알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남북정상회담을 남한 당국이 요청하나, 이는 상호주의 없이 엄청난 돈의 대가만 오갈 뿐 북한은 통일과 무관하게 만날 뿐이다. 그리고 북한은 남한 주민이 북한과의 통일이 어렵고 언제 북한 주민과 만날 수도 없다보니 오로지 남북정상의 몫으로 통일을 담보하는 경향이 있어왔다. 혹은 북한의 상징적인 독재자가 사망하면 당연히 통일은 남북한에 오겠지 하는 환상도 했던 적이 있다. 그러나 진정한 통일은 남북한 주민에 의한 DMZ가 붕괴되는 데 있다, DMZ가 붕괴되려면 남북정상회담으로 오가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 주민들이 오갈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의 제재 없이 남한에서 스스럼없이 일 자리를 찾고 관광할 목적으로 방문하는 것이 바로 DMZ가 붕괴되고 남북한 주민들이 원하는 통일이 될 것이다. 이는 독일통일이 동서독 주민들에 의해서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는 것에서 시작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하겠다.

## V. 결론

이 글은 미·소 군정의 한반도 분단과 38°선 획정, 6.25전쟁을 회고하면서 DMZ 탄생의 역사적 난제와 해결방안을 고찰하는데 근본적인 연구의 목적을 지닌다. DMZ 연구를 위해서는 한반도 분단과 관련된 역사적 난제들을 풀어나가야 한다. 38°선도 그렇고, MDL도 그렇고, DMZ도 그렇고, 외세들이나 외세에 합작한 노력의 산물이 결국은 한반도 분단과 분열임을 떨쳐낼 수가 없다는 생각이다. 이 뜻은 아직도 한반도는 통일이나 통합의 실체가 민족 내부이기보다는 외세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북한이 3대세습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유일사상과 북핵에 집착하고 있는 시점에서 북핵 폐기와 평화체제가 한반도에서 존재해야 하는 까닭인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 분단과 관련된 역사적 난제들을 풀어나가는 노력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이 글에서 38°선을 소환한 이유도 DMZ와 맥락을 같이 한다는 점이다. 대체적으로 기존 연구경향은 분단과 불통일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겠지만, DMZ를 상수로 보고 평화적 이용이나 관광이나 식물 및 생태, 토지·지형·기후 및 지리공원, 공간적 특성과 범위, 자연유산 및 자원보전 등 다양한 변수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를 극복하면서 한반도가 평화와 통일 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그동안 외세에 의해 결정된 한반도 분단과 38°선 획정, 6.25전쟁, MDL(휴전선), DMZ, 그리고 정전협정 등이 딜레마가 아닐 수가 없다.

이 글 문제의 핵심은 한반도가 아직도 요원한 분단으로 고착화되고 통일의 미래가 밝지 않다는 데 있다. 북한이 3대세습을 통해 체제유지와 유일사상을 고집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은 어렵다는 생각이다. 그 과정에서 DMZ는 한반도 허리부분에 남북이 동서를 가로질러 교차하고 있고 정전(停戰), 휴전(休戰) 상황이 끝나는 종전(終戰)으로 마무리되고 있지 않다. 결국은 한반도의 평화나 통일을 위해서는 38°선과 6.25전

쟁, MDL(휴전선)과 DMZ를 새롭게 개선해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분단 76년 정전 68년이 되었지만 한반도는 달라진 게 없다. 과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위한 6자회담도 소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장기간의 분단과 정전체제가 오래가면서 국민들은 피로감이 지나쳐 아예 DMZ를 잊고 사는 양태를 보인다. 그래서 학문적 연구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때 그나마 DMZ를 매개로 한 연구가 진척되고 있음은 다행이라 생각된다. 그것도 융합연구로 수많은 학문분야에서의 각고의 노력은 분명 한반도의 고착화된 분열과 분단을 해소할 수 있는 유효유적 역할을 하리라 본다. 요컨대 동서독 주민들의 통일에 대한 열정은 베를린 장벽의 붕괴과정에 바로미터였던 만큼,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과 인권 개선은 DMZ가 해체될 때 통일로 촉발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이 통일과정에 당당히 다가올 수 있도록 인내하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한국 정부가 굴욕적인 대북 저자세를 지양해야만 할 것이다.

또 한 가지 생각할 점은 2021년 9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뉴욕 UN본부에서 남북한이 유엔 동시 가입 30주년을 맞아 한반도 종전선언을 촉구했다는 점이다. 즉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됐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한 것이다. 그러나 냉랭한 국제사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촉구한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해 미동도 없었다. 정전(停戰), 휴전(休戰) 상황이 끝나기를 바라는 종전(終戰) 선언을 국제사회에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북핵 저지에 힘써야 함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문재인 대통령은 평소 북한의 비핵화에 초점을 맞춰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굳건히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지연. 2020. “효과적인 해외 파병 임무 수행을 위한 군사통합 방향 연구: 독일 군사통합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사회』 4(6).
- 국방부. 1998. 『국방백서 1997-1998』. 서울: 국방부.
- 김강녕. 2020. “동서독 정상회담: 통독과정에서의 역할과 한국에의 시사점.” 『한국과 국제사회』 4(6).
- 김광식. 1985. “미군정과 분단국가의 형성.” 최장집 편, 『한국현대사 I』. 서울: 열음사.
- 김석영. 1973. 『판문점 20년』. 서울: 진명문화사.
- 김양명. 1981. 『한국전쟁사』. 서울: 일신사.
- 김재철. 2011. “DMZ 탄생과정의 재조명과 평화적 활용방안.” 『동북아연구』 26(2).
- 김현정. 2020. “독일통일, 동·서독 주민의 정체성 형성과 게마인샤프트 복원.” 『한국과 국제사회』 4(6).
- 김현정. 2021. “분리와 통합의 관점에서 바라 본 키프로스 분쟁과 DMZ 문제.” 『한국과 국제사회』 5(5).
- 김형섭 역. 1981. 『다뉴브강에서 압록강까지』. 서울 : 국제문화출판공사.
- 장용운. 2005. 『접경지역 평화지대론』. 서울 : 연경문화사.
- 정주신. 2021a. “분단 독일과 통일 독일; 베를린 장벽의 구축과 해체에 관한 변증법.” 『한국과 국제사회』 5(2).
- 정주신. 2021b. “독일통일과정에서 동서독 주민들의 역할 분석: 남북한 통일에의 함의.” 『한국과 국제사회』 5(3).
- 정주신. 2020a. “분단국의 정상회담 어젠다 설정과 그 후속조치의 실행 가능성 비교연구: 동서독과 남북한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사회』 4(4).
- 정주신. 2020b. “베를린 장벽 붕괴와 독일 통일의 인과관계.” 『한국과 국제사회』 4(6).
- 정주신. 2020c. “시기별 탈북자 성향 분석: 입국과 초기 정착과정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사회』 4(3).

- 정주신 외. 1993. 『한국정치론』. 서울: 지구문화사.
- 정주신. 2011. 『한국정치론』. 대전: 프리마북스.
- 정태일 외. 2020. “독일분단의 기원에 대한 검토: 알타회담 전후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사회』 4(6).
- 제성호. 2000. 『한반도 평화체제 모색』. 서울 : 지평서원.
- 제임스 I. 매트레이. 1989. 『한반도의 분단과 미국: 미국의 대한 정책, 1941-1950』. 서울: 을유문화사.
- 최장집 편. 1985. 『한국현대사 I』. 서울: 열음사.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편. 2020. 『독일 통일 30년, 한반도 모색』. 대전: 프리마북스.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편. 2011. 『분단국의 통일사례와 한반도 통일 과제』.  
대전: 프리마북스.
- 매일신보 1945/09/03.
- 두산백과, <http://www.doopedia.co.kr> (검색일: 2021/02/24).
- (주)천재교육 | BY-NC-ND: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24XXXXX65644>  
(검색일: 2021/02/23).
-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201XXX1811057> (검색일: 2021/  
02/21).
-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b25h3487a> (검색일: 2021/03/20).
- <http://blog.naver.com/lckhds/60188842852> (검색일: 2021/03/14).
-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24XXXXX65644> (검색일: 2021/  
02/23).
- <https://blog.naver.com/cpath/222420254747> (검색일: 2021/07/13).
- <https://blog.naver.com/tryxtry/222396441676> (검색일: 2021/04/21).

투고일 : 2021년 9월 13일 . 심사일 : 2021년 9월 24일 . 게재확정일 : 2021년 9월 30일

\* 정주신은 경희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충남대학교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박사수로 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10월 부마항쟁: 유신체제의 붕괴』, 『독일 통일 30년, 한반도 모색』(공저), 『4·15총선과 한국의 민주주의』(공저) 등이 있다. 그 외 논문으로는 한국과 동서독 통일 문제, 한국과 영국의 정당정치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대중음악과 글로벌문화콘텐츠에 관심이 많다.

<Abstract>

## Historical difficulties and solutions to the birth of the DMZ

Chung, Joo-Shin  
(Hanbat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historical difficulties and solutions to the birth of the DMZ while recalling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38° line of the U.S.-Soviet military government, and the Korean War. For DMZ research, historical difficulties related to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must be solved. The 38° line, the MDL, the DMZ, and the result of the joint venture with foreign powers and foreign powers eventually led to division and Conflict of the Korean Peninsula. This means that the reality of unification or integr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s still determined by foreign powers rather than within the people. However, efforts to solve historical difficulties related to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are rarely seen. The reason why the 38° line was summoned in this article is because it is in the same context with the DMZ. In the end, it is thought that it is time to renew the 38° line, the Korean War, and the MDL and DMZ for peace or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t has been 76 years since the division and 68 years of cease-fire, but nothing has changed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past, six-way talks for denuclearization and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should also be summoned.

**Keywords** : DMZ, MDL, Historical difficulties, 38° lin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